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

— 建築士 國家考試를 中心으로 —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란 없다. 당대에 본인이 못한 말이나 노래는 언젠가 후일에 반드시 누군가가 부르게 된다는 역사의 체험을 알고 있다. 우리 직업이 건축사란 전문직이다. “노가다”도 아니고 代書쟁이도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建築士國家考試란, 옛날로 치면 科學같은 것을 치루어 합격하고 (장원급제),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장관으로부터 사무실개설 허가를 받아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어, 면허증과 사무소등록증을 나란히 벽에 걸어 놓아야 했고, 사무실 명칭도 自營은 규제나 지시(행정관서에서)를 받아서 비로소 건축의 창작활동(그들은 영업행위라고 영업세를 매년 내게 했다)을 하는데 말로는 간단하지만 복잡하기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전공분야 쪽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까다로와야 하는지 분노를 느낄 정도였다.

獨白이란 대상없이 혼자하는 말 즉,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웅변보다는 더 큰 대상에게 호소하고 고향지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이 1988년 2월25일이다. 즉 國民總選에 의해 처음으로 正統性을 획득한 13대 大統領의 취임식 날이다. T.V. 로 그 광경을 보고 이 붓을 든 것이다. 오늘이 오기까지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파란뿔은 혼란과 사건들도 많았다. 취임식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실감있게 역사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평화적 정권의 이양이니, 새로운 民主化 時代의 시작이니, 또는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정직한 행정,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개방, 자율화, 권위주의의 타파라는 등의 생동하는 낱말들로 수놓아 지면서 이어져 나갔다. Show 적인 면은 보이지 않았고 기계적인 박수도 적었다. 깃하니 하는 말도 들리지 않았고 좌석배치에 있어서도 어떤 신경을 쓰거나 격차를 두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해내는데 왜 이때까지는 이와 정반대적인 작태가 벌어졌으며 구토증나는 權威主義나 獨善이 판을 쳤을까? 그때는 우린 무서웠고, 겁을 먹고 있었고, 하고싶은 말을 할수 없었고, 수많은 제약을 받았었다.

누가 우리에게 겁을 주었고 독선과 권위의 판을 만들었던가? 偉大한 普通사람도 될 수 없는 우리 건축사들. 어쩌면 小市民, 凡人 零細庶民들이었던 건축사들은 겁을 먹고 살았고, 말을 못하고 살았고, 기가 죽어서 살았고,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살아왔고, 어떤 체제나 기구에 종속된 모습으로 살아왔다. 누가,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가? 아무도 그 대상을 본적이 없다. 그러나 어슴프레나마 속으로는 할말이 많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자위도 해왔다. 아니 어제까지 용케도 참아왔다고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自慰란, 사회의 제반상황이 힘의 함수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대항할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쓸개를 씹듯 스스로 터득한 처세술이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만 두고보자, 기다려보자, 우리도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응어리가 만천하에 포효할 날이 올 것이며 겁을 먹은 우린 우리들에게 겁을 준 대상에게 겁나는 일을 해줄수 있을 것이고 도리어 그들에게 겁을 줄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자위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13대 대통령 취임식의 광경을 보고 새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확실히 국민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성인의 말같은 어구가 나열되어 있음을 들었다. 여기서 이런 말을 믿어도

좋은가? 라는 일말의 起憂도 없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나 결의가 엿보여 “아, 이렇다면 믿어볼만하고 느긋이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民主나 言論에 대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유, 자율화, 협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때까지 해야하면서도 못한 말들을, 봄 시냇물에 얼음이 녹아 흐르듯이 풀어내 독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란 없다. 당대에 본인이 못한 말이나 노래는 언젠가 후일에 반드시 누군가가 부르게 된다는 역사의 체험을 알고있다. 우리 직업이 건축사란 전문직이다. “노가다”도 아니고 代書쟁이도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建築士國家考試란 옛날로치면 科擧 같은 것을 치루고, 합격하고(장원급제),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장관으로부터 사무실개설허가를 받아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어, 면허증과 사무소등록증을 나란히 벽에 걸어 놓아야 했고, 사무실 명칭도 自營은 규제나 지시(행정관서에서)받아서 비로소 건축의 창작활동을(그들은 영업행위라고 영업세를 매년내야 했다)하는데 말로는 간단하지만 복잡하기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전공분야쪽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까다로워야 하는지 분노를 느낄 정도였다.

위의 이야기는 建築士國家考試에 합격한 다음의 이야기이지만 이 고시를 치루는데의 절차나 양식이나 규정 또한 복잡한 것이고, 응시자격에서부터 절차, 과정의 迷路같은 규정들, 시험요원의 위임에서 출제·채점 및 당락 결정등, 이 모두가 어떤 기록되지 않은 묵인된 要領이나 體質이었던 것이고, 그런것들이 앞에 말한 권위주의, 독존주의나, 응시자들의 건축설계 능력을 가늠한다기보다 출제의 권위와 관의 위엄과 권한,

채점의 효율이나 편리,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의 배합율등, 합격자수의 커트라인의 결정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건설부)의 힘과 독선이 이런 일을 당연한 것으로 태연히 해치워왔던 것이다.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인 건설부와 출제에서 채점을 하는 시험위원들(대개가 위촉받은 공과대학교수들이다), 출제의 내용, 건축사협회의 입장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가소로운일들이 허다한 것이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건축사국가고시도 건축관계 3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보면 어떨까.
3 단체가 고시위원회를 조직해서
건축의 본질이나 특성을 살리고
국가나 사회의 건축정책에 자문을 주고
가장 공평하고 건축적인 고시를
운영해낸 다음 면허도 그 위원회가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이런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국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먼저 주무관청인 건설부인데 알다시피 官이므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建築士國家考試의 立案에서부터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막말로 관료주의적인 업무진행을 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명분이 건설부인 자기네 소관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힘이란 정의보다도 약에 대한 경향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입안이나 계획은 長次官의 결제를 득했으나 기안은 말단에서, 어찌면 전문적인 공무원들이지만 건축사면허를 취득못한 부위에서 사무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계통을 따라 長次官의 결제를 거칠 뿐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그 상대자들의 집단이라고나할 건축사협회와는 협의나 동의를 없다. 상대의 동의없는 처사를 우린 독선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일의 진행이 당연화되면 우리도 훗날 후세들에게 못난 조상이 될 것이고, 협의나 동의없이 독단이란 目標直達로만 가는 것을 우선하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사회의 속성에 빠질 것이다.

둘째 위촉된 考試委員들의 문제이다. 대부분이 교수들이다. 교수들은 문제가 어렵고 까다롭고 애매한 것을 출제해야 자신들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채점의 고역을 면하기 위해 객관식문제를 많이 낸다. 이들은 건축과 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객관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채점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서인지 실체가 그러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972~73년에 필자도 시험위원의 위촉을 받은 일이 있어 출제전 전체회의에 참석했더니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고 참을 수 없어서 주관식문제 80%에 객관식문제 20%를 주장했고 의결시킨 다음, 이 率은 변경시키지 말고 계속하자는 것까지 약속한 바 있었고 당년의 고시에서 합격률이 전체응시자의 26%가 나온 것인데 그 당시로서 가장 많은 합격률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후 수년간의 합격률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는데 13%~17%가 고작이었다. 여기서 醫科大學졸업생들의 專門醫試 합격률을 알아 보았더니 약 80%선임을 알고 이나라의 공과대학 건축과는 다른나라 학교의 학과인가, 이런 문제를 문교부는 알고있을까? 알고있다면 건설부소관이니깐 오불관이란 것인가, 라고 흥분하고 의분을 느낀 기억이 새롭다. 건축사국가고시란 백번 확실히 말해서 학교의 入學試驗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나 회사의 채용시험도 아니다. 건축설계능력을 가늠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資格考試인 것이다. 따라서 극언하면 전원이 불합격할 수도 있고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합격한 후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든지 안하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축면허증을 주면 되는 것인데, 솔직히 건설부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년간에 예상되는 건축설계 업무량과 배출된 건축사와 배출될 건축사의 수의 대비 즉 작업량과 인력의 수요계획이 개략적으로나마 수립되어 있는가를 의심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어느 해 갑자기 우리의 건축계가 중동과 사우디의 활발한 건축경기로 호황을 누린 적이 있었을 때를 회상해보면, 각 설계사무실의 직원들을 건설회사들이 설계사무실 봉급의 3배 이상을 주고 뽑아간 적이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10년에서 15년정도씩 키운 직원을 일시에 5~6명을 빼앗겼었다.

대규모 재벌급회사들과 영세적인 설계사무실과의 사이에 직원봉급을 가지고 대항할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젊은이들은 다액의 봉급과 외국에 간다는 흥분에서 잔뼈가 굵은 사무실을 박차고 중동으로 갔던 것이다.

이때와 같은 경우 建築士考試의 合格者率은 어찌될 것이며, 설계보조사나 보조원이니라(등록시키다) 복잡한 규정(법이 아닌 행정칙의 자의로 하는 권한인 재량)등도 있지만 그후 몇년있다 중동과 사우디가 사양길로 들어서자 기자재와 장비와 인원이 철수하면서 언제인가 유혹해서 뽑아간 인원들을 대가다 뭐다해서 해고시켰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옛 사무실에 와보니 규모나 봉급이 합당치 못해 기웃거리다가 거리로 나갈수 밖에 없었다. 바로 전례를 체험했다면 작업량과 인원의 수요계획을 정밀히 한 다음 건축사 시험의 합격선의

커트라인을 부득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을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工專은 더욱 많이 설치하면서 그들이 공전을 졸업하고 직접 현장에 고급직공으로 나갔는가? 거의가 대학편입시험을치고, 고급이란 명찰이 붙여진 직공을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工高로 내려와서 보면 거의가 대학아니면 공전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지 않은가. 극언해서 建築士國家考試는 建設部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文敎部 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마저 가져보게 된다.

“버나드 쇼”는 희곡 한편 쓰는 것보다 법조문을 하나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다. 건축사법의 개정문제나, 법은 아니지만 각종의 습이니 細則이니 規定이니 條例등 심지어는 어떤 상부의 지시는 쉽게, 간단히 남발되고 法이상의 효력과 피력을 가지고 행사된다. 교육을 시킨다, 모여라, 안오면 벌을준다. 수첩을 가지고 본인이 와야 된다. 각 구청에선 구내건축사가 자기들의 수졸이나 되는양 오라가라, 협회를 통하거나 공문, 서류로도 가능한 일까지도 집합 명령이 가끔 내린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아침 새대통령은 인권을 절대 보장한다고 했다. 두고볼 일이다. 국민자존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고, 관이 민에 군림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과 자율이 국정의 우선순위라고 확언을 했다. 우린 두고 지켜볼 것이고 또 이런 올바른 일에 협력하고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어제까지의 묵은 용어들은 한강에 속시원하게 흘러보내고 새 출발하는 民主의 시대가 출발신호를 올렸다. 여기서 우리들의 시대의 건축사들의 독백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주제가 금년 5월에 실시될 건축사 국가고시가 문제이다. 앞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과 같은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새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건축사국가고시도 건축관계3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보면 어떨까. 3단체가 고시위원회를 조직해서 건축의 본질이나 특성을 살리고 국가나 사회의 건축정책에 자문을 주고 연구해서 가장 공평하고 건축적인 고시를 운영해낸 다음 면허도 그 위원회가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국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974년 호주를 여행했을때 수도 “캄베라”에서 N.C.D.C 란 기구를 견학했다. 이 N.C.D.C(National Capital Development Committee) 라는 약자는 수도개발위원회란 뜻이지만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는 민간건축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놀라운 것은 건축허가에서 면허수여시험, 전국토개발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관이 아닌 건축전문가들로서 처리하고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관공서의 건물신축시에도 이곳 N.C.D.C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것을 보고 누가 호주를 囚人들이 세운 나라라고 깔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영국의 봉건적 중세기 사회에서 사상범이나 정치범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유주의자들이요 개척주의자들이고, 민주주의자들이었었던 즉 이런사람들이 본국에서 먼 호주란 무인의 신천지에 유배되었으나 그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요, 이곳에서 그들 理想의 국가를 건설하려고한 것이 호주일텐데 모르는 무식한 세계인들은 호주는 죄수들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 이것이 자유요, 자율이요, 민주화였던 것이고 타민족이 이민해오면 오염이 된다해서 백호주의란 이민금지의 사상도 대두되었었고(현재 이법이 철폐되고 이민이 가능하다), 하여간 이런 우리 사회의 대전환의 기회에 건축사국가고시를 건축3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